산업현장의 법치 확립은 국민의 바람입니다.

1. 관련 기사

- 8.20.(화) 뉴시스, “尹 건폭 발언은 과격...예방조치 강구 필요” 의견 표명, 경향신문(인터넷) “인권위, 윤 대통령 건폭 표현 두고 노조 향한 과격 발언 삼가야”

2. 설명 내용

- 그간 건설현장에는 금품요구, 채용·장비사용 강요, 협박·폭행 등 불법·불합리한 관행이 형성, 건설 공사기간 지연 등이 사회 문제화되어
 - 반칙과 특권을 근절하기 위한 건설현장 집중 단속을 비롯하여 불법적 집단행위 등에 대해 엄정 대응해 왔음
 - 기사에서 언급된 일부 발언은 이러한 불법행위 자체의 문제점에 대한 것일 뿐 정당한 노조 활동에 대한 부정적 의미를 담은 것이라 보기는 어려움
- 불법행위를 근절하고자 하는 정부의 의지는 변함이 없는 만큼, 앞으로도 엄정한 법집행으로 산업현장에 공정과 상식, 정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 나가겠음

담당 부서	고용노동부 노동개혁총괄과	책임자	과 장	양현수	(044-202-7740)
		담당자	서기관	고혜연	(044-202-7742)
	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	책임자	과 장	전인재	(044-201-3538)
		담당자	사무관	문선일	(044-201-3490)
	행정안전부 산업교통재난대응과	책임자	과 장	김유순	(044-205-6330)
		담당자	사무관	김종집	(044-205-6340)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